

신문 모니터

- 문서번호 부산총감연2020-0414-신문06
- 수 신 각 언론사 미디어 및 NGO 담당 기자, 사회부 기자
- 발 신 부산2020총선미디어감시연대지부
- 제 목 정책·공약 오간 후보자 TV 토론회 관련 기사, 정책보다 ‘불륜’이 중요한가
- 날 짜 2020년 4월 14일(수)

정책·공약 오간 후보자 TV 토론회 관련 기사, 정책보다 ‘불륜’이 중요한가

.....

부산2020총선미디어감시연대지부는 부산지역 신문(국제신문, 부산일보)과 지상파방송 메인뉴스(KBS부산, 부산MBC, KNN 저녁종합뉴스)를 주요 대상으로 선거 보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다음은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를 대상으로 4월 6일(월)부터 4월 10일(금)까지 5일간 진행한 신문 모니터 6차 보고서이다.

분석기간	4월6일(월)부터 4월10일(금)까지
분석대상	국제신문, 부산일보
분석기사	제목은 물론 내용에서도 “선거”, “총선”, “지역구”, “지지율”, “유세” 등 선거와 관련된 단어가 한 번이라도 언급된 기사 모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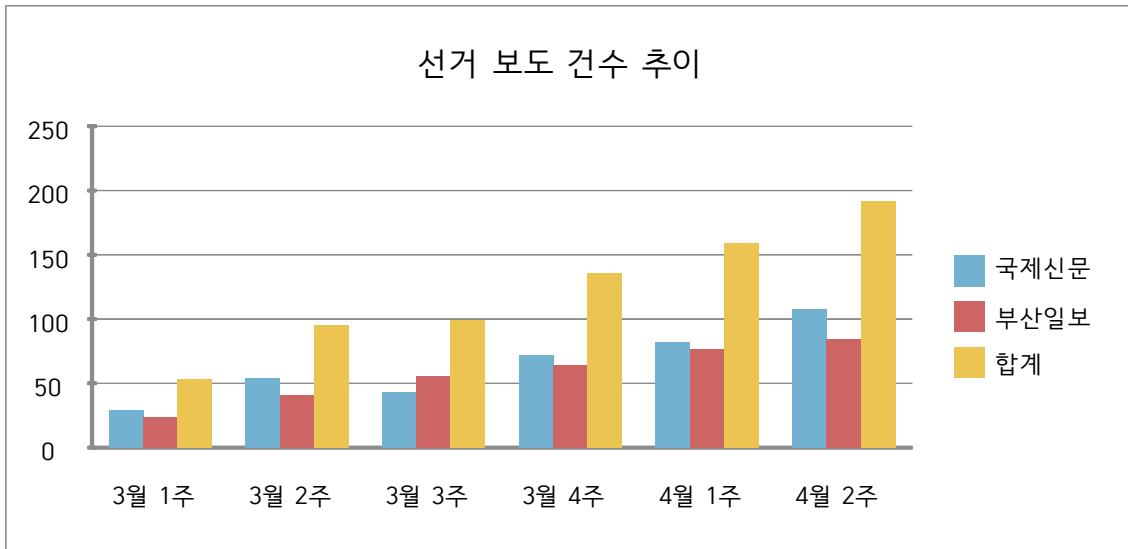
△ <표1> 부산지역 일간지 4·15 총선 관련 보도 양적 분석 개요

4월 둘째 주, 선거 보도 193건 모니터 기간 꾸준한 증가세 보여

4월 둘째 주 선거 보도는 193건으로 모니터 기간 내 가장 많은 보도 건수를 기록했다. 총 보도 수 대비 비중으로 봤을 때도 전주보다 4.3% 상승한 26.8%를 보였다. 국제신문은 전주 84건보다 27건이나 더 많은 선거 관련 기사를 생산했고, 총 109건 보도하였다. 부산일보도 전주 77건보다 증가한 84건을 보도했으나, 국제신문에 비해 보도량이 적었다.

보도유형을 살펴보면, 스트레이트 기사가 79.6%로 가장 많았으나 처음으로 80% 미만의 수치를 보였다. 다음으로는 칼럼(7.2%), 사진(6.2%), 사설(4.1%), 기획·연재·특집(2.6%), 사실 확인 보도(0.5%) 순이었다. 4월 둘째 주는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전과 비교해 칼럼과 사설 비

중이 증가했고, 사설을 통한 언론사의 메시지 전달이 눈에 띄었다.



구분		국제신문	부산일보	합계
보 도 량	선거 보도 수	109	84	193
	총 보도 수	393	325	718
	총 보도 수 대비 비중	27.7%	25.8%	26.8%
	지난 주 대비	+ 5.9%	+ 2.4%	+4.3%
보 도 유 형	스트레이트	85	67	153
		79.6%	79.7%	79.6%
	기획, 연재, 특집	3	2	5
		2.7%	2.3%	2.6%
	인터뷰	0	0(1)	0
		0.0%	0.0%	0.0%
	사설	5	3	8
		4.5%	3.5%	4.1%
	칼럼	7	7	14
		6.4%	8.3%	7.2%
	사진	7	5	12
		6.4%	5.9%	6.2%
사실 확인 보도	1	0	1	
	0.9%	0.0%	0.5%	
기타	0	0	0	
	0.0%	0.0%	0.0%	

△ <표2> 매체별 4·15총선 관련 보도건수와 비중

사설은 신문사의 주장이자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4월 둘째 주 선거를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는 사설을 통해 무엇을 중요하게 다뤘는지 살펴보았다. 선거 관련 사설은 국제신문 5건, 부산일보 3건으로 총 8건이었다. 먼저, 두 신문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경쟁적으로

내놓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안을 두고 ‘선심성’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부산일보 <재난지원금, ‘총선 선심 경쟁’으로 번져서는 안 된다>(4/7)은 “어렵게 결정된 재난지원금이 표심을 노린 정치판의 선 거용 노리갯감으로 전락한 것 같아 너무 안타깝고 분통이 터진다.”며 “이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분명한 입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제신문 역시 <표심 경쟁에 결국 선심성으로 변질된 재난지원금>(4/8)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 결국 총선용으로 전락할 조짐”이라며 “정부가 여야와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덧붙여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부산 방문 이후 이 전 총리의 발언을 두고 부산일보는 <“신공항 해결하겠다”, 여야 분명한 입장 밝혀라>(4/9)를 통해 신공항 해결에, 국제신문은 <균형발전 핵심 실종된 총선 공약, 여야 의지는 있나>(4/8)을 통해 공공기관 이전에 초점 맞췄다.

이외에도 사전투표와 관련해 <코로나 속 사전투표, 방역 만전 기하고 적극 협조를>(국제신문, 4/9), <사전투표 시작, 코로나19에도 무서운 민심 보여 줘야>(부산일보, 4/10)을 보도했다.

구분	국제신문	부산일보
4월6일	‘깜깜이 선거’ 피하려면 선거 공보물 꼼꼼히 살펴야	.
4월7일	.	재난지원금, ‘총선 선심 경쟁’으로 번져서는 안 된다
4월8일	균형발전 핵심 실종된 총선 공약, 여야 의지는 있나	.
	표심 경쟁에 결국 선심성으로 변질된 재난지원금	
4월9일	코로나 속 사전투표, 방역 만전 기하고 적극 협조를	“신공항 해결하겠다”, 여야 분명한 입장 밝혀라
4월10일	막판 치달는 선거전…혼탁·막말 유권자가 심판해야	사전투표 시작, 코로나19에도 무서운 민심 보여 줘야

△ <표3> 4월 둘째 주 선거 관련 사설 목록

관행적 비판은 유권자 불신만 높여 정치혐오 유발 구체적인 분석과 대안제시 동반 돼야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는 총선 일주일 앞두고 우후죽순처럼 쏟아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여야가 지급액과 지급 대상을 경쟁적으로 늘리는 것은 분명 비판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정당이 쏟아내는 지급안을 단순 전달하거나, 선심성 공약이라 싸잡아 비판하는 방식의 보도 관행은 결국 정책공약에 대한 유권자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

부산일보는 <“표심, 돈으로 사나” 재난지원금 판 키우는 여야>(부산일보, 4/7)는 민주당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하자, 황교안 대표의 발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통합당이 갑자기 입장을 선회한 것도 재난지원금이 “여당의 지지율 상승세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며 양대 정당이 서로 경쟁적으로 선심성 공약을 내놓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제신문 <4인 가구 민주당 100만원 vs 통합당 200만원 vs 정의당 400만원 … 재난지원금 경쟁>(4/7, 9면) 기사도 “4·15총선을 코앞에 두고 여야가 코로나 19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확대 경쟁에 불을 붙였다”며 각 정당의 지급안을 나열했다.

위의 두 기사는 각 정당의 긴급재난지원금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보다 표를 얻기 위한 여야의 선심성 공약으로 축소시켰다. 각 정당이 내놓은 지급액에 따른 경제적 효과나 재원조달방안 등에 대한 정보는 기사를 통해 제공하지 않았다. 두 신문 모두 비판적으로 접근했으나 ‘선심성’이란 평가만 있을 뿐, 구체적인 분석과 대안 제시로는 이어지지 못하였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급부상한 총선 이슈임에는 틀림없기에 여야 모두 부실한 공약을 내놓은 것이라면 이를 꼼꼼하게 검증하고 비판하는 것이 지역신문의 역할이기도 하다.

한편, 선거 막바지가 되면서 주요 지면에 유권자로 하여금 정치적 냉소를 유발하는 헤드라인을 사용한 기사가 증가했다. <상대 약점만 캐는 선거, 민심의 선택은 시작됐다>(부산일보, 4/10, 1면), <조용한 선거 하자더니…역시나 도진 폭로·고소·고발전>(국제신문, 4/10, 2면), <인물, 전략, 정책 없는 ‘3無 PK 총선’ 최악 선거 되나>(부산일보, 4/8, 5면), <부산지역 총선 ‘진흙탕 싸움’…후보 대상 고소·고발 난무>(국제신문, 4/9, 9면)가 사례이다. 쉽게 정치적 냉소주의로 빠져서는 안 되는 게 유권자만은 아니다. 언론사 또한 마찬가지이다.

정책·공약 오간 후보자 TV 토론회, 왜 신문엔 ‘불륜’이 가장 먼저 언급 됐나

4.15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4월 2일부터 선거 전날인 14일까지다. 공식 선거운동의 시작과 함께 지난 2일부터 선거법상 규정된 후보자 법정 토론회도 이어졌다. 코로나19로 후보자와 유권자의 대면 소통이 어려운 시점에, 후보자의 자질과 공약을 검증할 수 있는 TV 토론회의 역할은 더욱 막중했다. 신문 지면에서도 후보자 토론회를 기사화한 보도들이 있었다.

4월 5일에는 부산 남구을 국회의원 후보자 TV 토론회가 있었다. 남구을은 국제신문과 부산일보 모두 ‘격전지’로 주목하고 있는 지역구로 두 신문 모두 다음날 일제히 보도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용호동 지역의 고질적인 교통난 문제 해결 방안’, ‘용호동 이기대 일대 개발 문제’ 등과 같은 ‘남구을’과 관련한 굵직한 현안에 대한 후보들의 논의가 오갔다. 하지만 다음 날 두 신문은 <“허위 불륜설 유포 왜” “부산구치소 이전 내 공”…후보 TV토론회, 정책 검증보다 감정싸움>(국제신문, 4/6, 3면), <불륜설 유포 공방·자질 의혹·낙하산 공세 ‘거친 설전’>(부산일보, 4/6, 3면)이라는 헤드라인으로 남구을 후보자 TV 토론회의 주요 키워드로 ‘불륜’을 내세웠다. 실상 토론회에서 ‘불륜’은 단 한 차례 언급됐다. 교통난 해결을 위한 트램 설치 방안이나 지역구 내 대학 지원 정책보다 불륜과 관련한 공방이 우선적으로 지면에 등장했다. 후보자 간 정책 토론보다는 감정싸움과 흑색 선전에만 초점을 맞춰 남구을 후보 TV 토론회를 보도한 셈이다.

“허위 불륜설 유포 왜” “부산구치소 이전 내 공”… 후보 TV토론회, 정책 검증보다 감정싸움

남을 박재호-이연주 도덕성 공방 긴급생활지원금 재원 마련 놓고 부산진갑 김영춘-서병수 철권 사상 배재정-장재원은 치적다툼

코로나19 여파로 대면선거 운동이 위축되면서 유권자의 눈길은 ‘TV 토론’으로 쏠렸다. 후보들은 정책·도덕성 검증 공방으로 난타전을 벌였다. 일부 후보는 인신 공격성 발언으로 유권자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박병의 승부처로 떠오른 부산 남구의 5일 TV 토론회에서는 ‘허위 불륜설 유포 논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미래통합당 이연주 후보는 ‘박재호 후보 최측근에게서 저를 두고 입에 담기 민망한 불륜설을 유포한 적이 있어 저의 캠프에서 고발할 것’이라고 공격했다. 이에 박 후보는 “이번의 선거를 남구에서 치르지만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욕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5일 열린 4·15총선 부산 남구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재호(왼쪽 사진, 미공개)와 이연주 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맞받았다. 두 후보는 오프라인 토론의 교차점에서 해소 가능성이 높을지, 오프라인 대면 토론을 통해 해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갔다. 지난 4일 부산진갑 후보 TV 토론회에서도 거친 설전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은 후보와 통합당 서병수 후보는 긴급생활지원금의 재원 확보 방안을 두고 송과 감을 했다. 김 후보가 “(서 후보 방안보다) 확고한 대안의 국제 40조 발행이 현실적”이라고 꼬집자 서 후보는 “기회비용”이라고 반박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김영춘과 서병수의 차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생당 장재원 후보는 김 후보를, 무소속 장근 후보는 서 후보를 타깃으로 삼아 공격했다.

지난 3일 사하갑 TV 토론회의 뜨거운 감자는 ‘식비 대안’ 불만선거 논란이었다. 최근 민주당 부산진갑에서는 김철수 후보가 청년을 모아 식비를 대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인호 후보는 ‘의혹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하라’고 지적하자 김 후보는 “청년조직 자체가 없다. 청년이 어디에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같은 날 사하갑의 TV 토론회에서는 ‘부산구치소 이전’을 두고 치적 다툼이 벌어졌다. 민주당 배재정 후보는 “부산시장 만나고 청와대 가서 비서실장 만나고 법무 장관, 교정본부장 만나고”라고 했고 통합당 장재원 후보는 “국정감사 때 ‘과밀 수용은 위험하다’는 지적을 하고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이전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얻어냈다”고 지적했다. TV 토론회에서 불거진 ‘자질 공방’은 장외로 확대됐다. 민주당 이재갑(사동) 후보는 4일 설명서를 내고 통합당 안병길 후보에게 ‘영비’ 발언을 사과하라고 물었다. 안 후보가 토론회에서 언론사 사장 재직 당시 자신을 둘러싼 퇴진운동에 대해 ‘몇 안 되는 죄가 한 행동’이라고

답하면 됐다. 민주당 강운경(수영) 후보도 지난 3일 설명서를 내 통합당 진봉민 후보가 토론장에서 밝힌 대표공약에 대해 ‘다 읽기 전에 손가락 얹기’라며 비판했다. 그는 “수영-선릉을 연결한 ‘투명 브리지’ 사업은 오거돈 부산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9년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는 “후원브리지 사업은 시의원 시절 2008년 수영장에서 해운대 구간의 자전거 전용도로 시범사업부터 검토되기 시작했다”며 “오거리 부산시의회가 2018년 ‘복합 가교’로 검토했었다”는 이유로 관련 예산을 두 번이나 삭감하면서 사업이 늦어졌다고 반박했다. 11대 총선 후보자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시 볼 수 있다.

김정환 기자 call@kookje.co.kr

△ 국제신문, 4/6, 3면

불륜설 유포 공방·자질 의혹·낙하산 공세 ‘거친 설전’

부산지역 후보자들 법정 토론회 후권 상태 후보 대한 각종 의혹 터져 나와 네거티브 공세에 ‘선저적 과열’ 조짐

제11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6일로 한 자릿수 카운트다운에 돌입한 가운데 상대 후보에 대한 각종 의혹 제기 등이 터져나오면서 선저적 과열되는 분위기다. 특히 지난 2일 시작된 후보자 법정 토론회에서는 허위사실 유포, 논문표절 등이 핵심 이슈로 등장 ‘네거티브’ 선거 양상도 보였다.

5일 오전 방송된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후보와 미래통합당 이연주 후보의 부산 남구 토론회도 치열하게 전개됐다. 특히 이 후보가 주도권을 가진 상호토론회에서 오히려 자신에 대한 공세를 언급하면서 열기가 뜨거워졌다. 이 후보는 “박 후보 최측근이 저(이 후보)에 대한 불륜설을 유포한 적이 있다”며 “후보가 사과를 해야 한다고” 공격했다.

박 후보는 남구에서 4번 선거를 하면서 상대 후보를 비방한 적이 없다”며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고, (선관위에)이전 통보도 없는데 언론에 박재호가 할 것처럼 과장 보도되고 있다”고 오히려 공격을 했다.

두 후보는 도시철도 트램(용호동)을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 박 후보는 “3년 전 공약한 국내 최초 무가선 지상 트램인 용호선이 올해 하반기에 착공



민주당 박재호 후보와 통합당 이연주 후보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부산 남구 후보자 토론회에서 상호토론회를 하고 있다. 아래는 남갑 후보자 토론회. 유튜브 캡처

해 용호동에도 도시철도 시대가 열린다”며 “트램은 승용차 25대, 버스 5대 승객을 한꺼번에 실어 나를 수 있어 교통의 미세먼지까지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이 후보는 “같이 다르다고 해서 지역 주민을 위한 일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1만 양복 4차선 도교인 용호도로 트램을 설치하는 2단계 구간에는 6·1의 차선에 택시, 자가용, 버스가 함께 다니기 때문에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지난 3일 남갑 토론회에선 후보 자질에 대한 새로운 이슈가 제기됐다. 남갑 정의당 현정길 후보는 “통합당 박수영 후보의 부자지 사할 수 없다. 교수인 배우자의 경기도 보조사업이 공공용에 대한 의혹이 있었고 그 용역을 추진한 공무원이 해임된 사건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아내가 수면제 교수인 것은 맞지만 펙트가

같은 날 열린 사하갑 토론회에서는 민주당 최인호 후보가 통합당 김철수 후보에 대해 “김 후보가 3년 만에 이직으로 행정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그 논문은 비공개”로 돼 있어 볼 수가 없다”며 “저술 자질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했다. 논문 표절 의혹 등을 염두에 둔 질문인 셈이다. 김 후보는 “지역에서 정치활동을 하면서 논문이 비공개인지 공개인지는 모르겠다”며 “바로 공개하겠다”고 했다. 또 최 후보는 “(김 후보 측)청년위원장이 40~50명의 유권자를 모아 놓고 식사와 술을 제공해 부정 선거운동이라는 보도가 나왔다”며 “해당 청년위원장의 이력을 볼 때 직접 거부 의혹까지 나온다”고 공세를 펼쳤다. 김 후보는 “그 자리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며 “저는 청년 위원회 같은 청년 조직이 (사당 모임이 있었던) 당시에는 아예 없었다”고 해명했다.

지난 4일 방송된 부산진갑 토론회에서는 4명의 후보가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김경은 후보와 통합당 서병수 후보가 소극주도당 등 경제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런 가운데 통합당 권정은 시정선거 시 후보의 전략공천 이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장근 후보는 서 후보를 향해 “낙하산”이라고 공세를 펼쳤지만 “김경은 통합당 공천위원장의 퇴장 공천 행정이 부산진갑에서 드러나”며 “기세가 서 후보를 몰아내었다”고 해명했다.

지난 4일 시작된 부산 지역 후보자 법정 토론회는 오는 9일까지 선거구별로 1회씩 예정돼 있다. 민지환 기자 call@busan.com

△ 부산일보, 4/6, 3면

대조적인 보도도 있었다. 부산일보와 국제신문은 후보자 토론회에서 나온 공방 중 일부 공세적 발언들만 묶어 한 건의 기사를 생산해 낸 반면, 뉴스1은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 중 좀 더 건설적인 부분에 주목해 두 건의 기사를 썼다.

먼저 <부산 남구를 TV토론…박재호 ‘지역 밀착형’, 이연주 ‘정권 심판’ 강조>(4/5, 뉴스1)는 TV 토론회에서 오간 주요 정책들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을 실었고 불륜 관련 공방엔 한 단락만을 할애했다. 이어 <부산 남구를 여야 선거공약에서 ‘대연1·3동’ 안 보이는 이유?>(4/8, 뉴스1)에선, 두 후보가 ‘용호동 일대 공약’에만 집중하면서 최근 선거구역 개편으로 편입된 대연 1·3동 관련 공약이 사라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부산 남구를 TV토론...박재호 '지역 밀착형', 이언주 '정권 심판' 강조

박재호 "남구 변화 계속돼야"...트램 유치 등 4년 성과 강조

이언주 "문 정권 이대로는 안 돼"...지역 문제 해결도 자신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2020-04-05 10:47 송고 | 2020-04-05 13:33 최종수정

부산 남구를 여야 선거공약에서 '대연1·3동' 안 보이는 이유?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2020-04-08 06:00 송고

△ '남구를 후보자 TV 토론회' 관련 기사 중 공약에 초점 맞춘 뉴스1 기사

뉴스1의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됐듯, TV토론회 관련 기사는 TV 토론의 내용을 성실히 옮기는 것만으로도 좋은 정책보도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는 TV 토론회를 거의 다루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뤘다 하더라도 '논란', '설전'으로 일축하는 보도 행태를 보였다.

구분	국제신문	부산일보	합계
경마성 보도	7	11	18
	6.4%	13.0%	9.3%
가십/이벤트 보도	0	2	2
	0.0%	2.3%	1.0%
일방중계 보도	2	0	2
	1.8%	0.0%	1.0%
양당/다방 단순보도	2	2	4
	1.8%	2.3%	2.0%
양대정당중심 보도	29	20	49
	26.6%	23.8%	25.3%
정치혐오 보도	4	3	7
	3.6%	3.5%	3.6%
전투/경기 표현 보도	13	10	23
	11.9%	11.9%	11.9%
지역/연고주의 보도	1	3	4
	0.9%	3.5%	2.0%
익명보도	4	3	7
	3.6%	3.5%	3.6%

생애 첫 투표를 앞둔 만 18세 유권자를 만나 <고등보터 일침 “불공정 교육제도가 조국 사태의 원인”>, <“부산 대기업 유치 전략 궁금”…“내가 후보라면 대중교통 공약”>, <SNS에 지지후보 소개 가능…특정 정당 기재된 모자 착용은 안 돼>를 보도했다. 기사는 “만 18세 고등학교 유권자는 4.15총선에서 작은 변수 정도로 취급됐다. 그러나 18세의 ‘고등 보터(voter)’들은 어른의 생각과는 별개로 청년 유권자로서 누구보다 진중한 자세로 한국 정치를 대하고 있었다. (중략) 그들의 진가는 결코 선거판의 미미한 변수로 폄하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간 지면에서 소외되고 있던 10대 유권자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좋은 기사로 평가한다. 다만 몇몇 부분 아쉬움이 있었다.

먼저 기획기사 제목이다. ‘고등보터’라는 기획은 만 18세 유권자를 ‘고등학생’으로 한정시켜 등장시키고 있다. 이는 기획 <알림>에서부터 드러났는데, “만 18세 고등학생 유권자에게 펜을 넘기는 코너 ‘고등 보터(voter)’를 준비했습니다.”라고 기획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 4월 6일자 국제신문 4면은 ‘만 18세 유권자가 보는 총선’이라 소개됐지만 ‘고등보터’ 좌담회는 학생들로만 꾸려졌다.

다음은 <고등보터 일침 “불공정 교육제도가 조국 사태의 원인”>(국제신문, 4/6, 1면)에서 “부산지역 고등학교 3학년 유권자는 7556명이다. 한 학교에 52명꼴이다. 특수학교를 포함해도 8093명에 그친다.”라고 언급한 대목이다.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를 분리한 이유가 불분명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언급은 아예 생략했다.

구분	국제신문	부산일보	합계
정책제공 보도	33	30	63
	30.2%	35.7%	32.6%
비교평가정보 보도	3	1	4
	2.7%	1.1%	2.0%
사실검증여부 보도	1	0	1
	0.9%	0.0%	0.5%
시민/사회/여론운동 보도	6	1	7
	5.5%	1.1%	3.6%
신진후보/군소정당 보도	3	1	4
	2.7%	1.1%	2.0%
시민질의 논평 보도	4	2	6
	3.6%	2.3%	3.1%
시민참여소개 보도	4	0	4
	3.6%	0.0%	2.0%
선거법 관련 보도	0	0	0
	0.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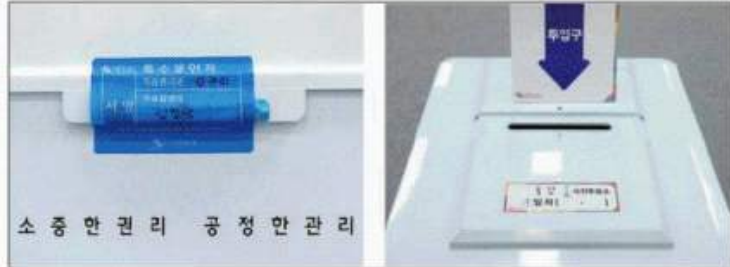
△ <표5> 매체별 4·15총선 관련 유익보도(*중복집계)

국제신문의 선거 기획 ‘진실 탐지기’는 지난번에 이어 연속으로 좋은 기사로 꼽혔다. <사전투표함 조작?…앞·뒤쪽 자물쇠로 철통 보관>(4/7, 2면)은 사전투표를 방해하는 ‘가짜뉴스’를 팩트체크했다. 기사는 관내 사전투표함 이송 과정에서 빚어진 오해, 사전투표함 봉쇄·봉인 과정, 보관 장소의 철저한 보안시스템을 근거로 사전투표 조작 가능성은 ‘0%’라고 설명했다. 4월 11,12일 사전 투표 기간을 앞두고 보도된 해당 기획기사는 사전투표와 관련한 유권자의 의심을 해소한 좋은 기사였다.

사전투표함 조작? ... 앞·뒤쪽 자물쇠로 철통 보관

진실탐지기

관내투표함은 이송 편한 행낭식 관리관·참관인 서명 특수봉인지 자물쇠 위에 붙여 재사용 불가 CCTV로 24시간 보관·이동 감시



자물쇠로 채워진 뒤 특수봉인지로 봉인된 사전투표함.

부산시선관위제공

'4·15 당일 투표하세요. 사전투표 ×, 당일투표 ○'.

4·15총선 사전투표가 오는 10-11일 진행되는 가운데 사전투표를 방해하는 '가짜뉴스'가 부산 골목을 파고들고 있다. 사전투표가 조작될 가능성이 있으니 당일에 투표해야 한다는 게 요지다. 이같은 내용의 스티커는 전봇대, 창틀 등 부산 곳곳에 붙여져 논란이 일었다. '부정선거 감시단' '공명선거 국민연대' 단체명이다. 이들 단체는 우익성향 단체로 알려졌다.

사전투표는 정말 조작될 가능성이 있을까.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조작 가능성은 '0%'다.

조작 가능성의 근거는 '투표함'이다. 사전투표소에서 썼던 투표함과 개표소의 투표함이 다르다는 의혹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같다'. 사전투표는 관내·외 두가지로 나뉜다. 관외 사전투표는 선거를 모

두 마친 후 등기우편으로 선관위에 보낸다. 의혹을 받는 건 투표함 통째로 보내는 관내투표다.

관내 사전투표함은 이동과 보관이 편한 '행낭식'이다. 행낭식 투표함은 재질 특성상 투표소에 장시간 세워놓기 어려워 받침대를 이용해 세워둔다. 투표가 끝난 후 받침대만 분리해 행낭식 투표함만 이송하다 보니 나온 오해다.

사전투표함 봉쇄·봉인 과정에서 부정이 일어나기도 매우 어렵다. 우선 투표·이송 등 사전투표의 전 과정에 정당 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이 참여하기 때문이다. 사전투표관리관과 참관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투표함 앞·뒤쪽을 자물쇠로 잠근다. 이후 관리관과 참관인이 서명한 스티커 형식의 특수봉인지를 자물쇠 위에 붙인다. 특수봉인지는 떼어내는 순간 특수문양이 나타나 떼어낸 뒤 다시 붙이는

등 재사용이 불가하다.

사전투표함의 바꿔치기 가능성도 '제로'다. 봉인된 사전투표함은 관할 구·시·군 위원회로 옮겨진다. 투표함을 옮길 때도 정당 참관인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이 동행한다.

보관장소에는 CCTV와 보안경비 시스템이 설치돼 있고 일반인 출입은 철저히 통제된다. CCTV에 녹화되는 화면은 중앙선관위, 시도선관위의 관제 시스템을 통해 24시간 모니터링된다. 보관된 투표함은 투표 당일인 오는 15일 오후 6시 개표소로 이동하고, 이동할 때도 정당 참관인, 정복 경찰공무원, 관할 선관위원이 함께하므로 조작 가능성은 없는 셈이다.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오는 10-11일 오전 6시-오후 6시)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가능하다.

김해정기자 call@kookje.co.kr

△ 국제신문, 4/7, 2면

이해찬 대표의 동일한 발언 놓고서

부산일보는 말실수에, 국제신문은 균형발전에 주목했다

지난 6일, 부산에선 더불어 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 대책 위원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해찬 대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안,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치인의 책무,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도입 취지, 마지막으로 경부선 철도 지하화를 언급했다.

부산 지역 관련 이슈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 경부선 철도 지하화 등이 언급됐지만, 다음날 신문이 주목한 건 “부산이 왜 이렇게 초라할까”라는 대목이었다. 부산일보는 3면 우측 상단에 이해찬 대표 사진과 함께 <부산 온 이해찬 “부산 왜 이렇게 초라할까” 발언 파장>(4/7, 3면)을 싣고 “이 대표의 이러한 발언을 두고 ‘지역 폄하’ 논란이 일었다”며, 해당 발언을 비판하는 통합당, 정의당, 부

산 여권 관계자, 시민당 측의 입장을 인용했다.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가 6일 오전 부산 연해주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었다. 회의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부적절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김영현 기자 view@

부산 온 이해찬 “부산 왜 이렇게 초라할까” 발언 파장

PK 고교분투 민주 후보들 곤혹
부산 야권 “비상식 발언” 비난

6일 부산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역 별파 발언 논란에 휩싸였다. 현지인 부산·울산·경남(PK) 전선에서 고교분투 중인 민주당 후보들은 중앙당 행사 참석을 위해 유세 현장 방문 시간을 어렵게 조개 냈지만 막말 논란이 터지면서 더욱 구석에 묻리게 생겼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석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전국을 다녔으면 절실히 요구하는 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었다. 좁은 정부 이후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많이 이전했지만, 대부분 서울 근처 아니면 경기도 대도시에서 국가 균형발전과는 아무 관계가 없었다”며 “홍선이 끝나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군2를 할 것”이

라고 말했다.

문제가 된 발언은 부산 경부선 철도 지원 공약을 설명하면서다. 그는 “부산에 올 때마다 매번 느끼는데 왜 교통체증이 많을까, 도시가 왜 이렇게 초라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이러한 발언을 두고 ‘지역 별파’ 논란이 일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어록이 부산 총선임을 강조하면서 경부선 철도에 안티까지를 설명하기 위해 인용했지만 표현 방식에 있어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야권은 이날 이 대표의 발언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통합당 김우석 선대위원장, “국대민간은 지방 온통을 통해 도무지 상상적으로 이해하지 않는,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라며 “초라한 것은 부산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부산을 한 번이라도 방문한 국민들에게 부산은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라며 ‘이 대표가 부산을

초라하게 느꼈다면 왜 그렇게 됐는지 문 대통령에게 묻고 민주당 소속 오기근 부산시장에 먼저 물어야 마땅하다. 바로 문재인 정부와 그가 이끄는 여당의 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도 가세했다. 그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상처가 될 수 있는 경솔한 발언이었다며 특히 정경애 대표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는 점에서 그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이 대표는 ‘지역 주민들에게 사과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이 대표의 잇단 막말로 대중의 비판이 쏟아지면서 지역 여론에서는 ‘문은 사과유용을 강조하지 말고 있다’

부산 여권 관계자는 “부산에서 선거를 치르고 있는 민주당 후보들은 대부분 초박빙 대결을 벌이고 있어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극도로 조심하고 있다”며 “중앙당 유세가 도움이 돼야 하는데 불리한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며 불리한 기색을 드러내지 않았다.

한편 이날 부산시당에서 열린 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공동 선대위 회의에서는 열린민주당에 대한 전체 발언도 나왔다.

시민당 유혜중 상임선대위원장은 “여의 시민당의 승리가 민주당의 승리가 되는지 모르는 분도 있다”며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앞세운 통합 정당 열린민주당이 당원과 시민을 존중스럽게 한다”고 주장했다. 우 위원장은 “과거 민주당을 박치고 나간 국민의당이 문재인 정부를 도왔나, 오라더 보수 세력과 손잡고 정부 개혁 드라이브에 발목을 잡았다”고 강조했다.

유혜정 의원 등 불출마 중인 의원들이 가진 ‘관태는 유세단’은 이날 오후 부산 지역 지지자를 지원사격에 나섰다. 유세단은 북강사를 최지은 후보, 사하갑 최인호 후보, 서동 이재강 후보, 금정 박우성 후보를 차례로 찾아 응원했다.

이은철 기자 anchew@

△ 부산일보, 4/7, 3면

이해찬 “부산 초라” 김대호 “30·40대 무지” 말실수 여야 “공들인 표심 한방에 흑갈 수도” 입단속 부심

각각 지역·젊은층 비하 논란 일어
선거 앞두고 최대 리스크로 부각

4·15총선을 9일 앞두고 여야가 격한 말을 쏟아내면서 당 주요 인사의 입이 최대 리스크로 부상했다.

미래통합당은 ‘3040세대’ 비하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 관악구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김대호 후보는 6일 서울 영등포당사에서 열린 통합당 현장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석해 ‘60·70대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열악한 조건에서 발전을 이룩했는지 잘 아는 데 반해 30·40대는 그런 것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태어나보니 어느 정도 살 만한 나라여서 이분들의 기준은

유럽이나 미국쯤 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60·70대에 끼어 있는 50대의 문제의식에는 논리가 있다’면서 “그런데 30대 중반, 40대는 논리가 아니다. 거대한 무지와 착각”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올해 57세다.

김 후보는 논란이 커지자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했다. 통합당은 김 후보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는 등 수습에 안간힘을 기울였다. 황교안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주 부적절한 발언이다. 그런 발언들이 나와선 안 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청년대변인은 논평에서 “거대한 무지와 착각 속에 빠진 이는 30·40세대가 아닌 김대호 후보 본인”

이라고 비판했다.

부산에서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초라한 부산’ 발언으로 도마에 올랐다. 이 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열린 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대위 회의에서 ‘부산에 올 때마다 왜 교통체증이 심할까, 도시가 왜 이렇게 초라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이런 발언은 부산 경부선 철도 지하와 공약을 설명하면서 나왔다. 경부선 철도 공약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 나온 발언이지만 ‘지역 별파’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통합당 하태경 부산선대위 공동총괄본부장은 페이스북에 “부산 비하 발언 이해찬 대표는 부산 시민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공격했다. 신심범 기자

△ 국제신문, 4/7, 2면

국제신문은 <이해찬 “부산 초라” 김대호 “30·40대 무지” 말실수…여야 “공들인 표심 한방에 흑 갈 수도” 입단속 부심>(4/7, 2면)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실언과 미래통합당 김대호 후보의 실언을 비슷한 비중으로 함께 언급했다. 이날 이해찬 대표가 실언을 한 자리에서 이야기 꺼냈던 균형발전 공약은 1면에 따로 기사로 실었다. 1면 기사는 <총선 공약서 ‘균형발전’ 사라졌다>로 이해찬 대표의 공공기관 이전 공약의 진정성과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해당 기사는 이해찬 대표의 발언을 두고 “수도권에서는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쉬쉬하고 지역에서는 득표를 의식한 이 같은 발언이 과연 총선 후에 지켜질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해찬 대표의 실언에 대한 보도를 비교하자면, 부산일보는 그 자리에서 이 대표가 제안했던 부울경 정책을 풍부하게 설명하고 있기는 하지만 제목과 비중에서 실언을 한 인물 자체를 더 강조하는 구성을 취했고, 국제신문은 민주당과 통합당에서 동시에 일어난 해프닝으로 같은 비중을 뒀다.

부산일보에서도 균형발전과 관련한 공약기사가 있었다. 8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부산·경남을 방문해 “(동남권)신공항 문제를 풀어 가겠다”고 밝힌 데 주목해 9일자 1면 머릿기사로 <‘신공항’ 거리 두던 이낙연, 투표 다가오자 “적극 해결”>을 보도했다. 기사는 그간 원론적인 입장만 취해오던 이낙연 전 총리가 총선을 앞두고 신공항을 다시 언급한 것을 두고 총선용이라 비판했다. 기사는 표면적으로는 이낙연 후보를 비판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부산일보의 실질적인 메시지는 기사 말미에 제시된 다음 문장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1위인 이 전 총리가 공식적으로 해결 의지를 보이면서 신공항 문제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는 시각도 있다. 부산 정치권 관계자는 “어쨌든 여당의 유력 대선주자이고, 여당 내 영향력이 큰 이 전 총리가 직접 신공항 해결을 언급한 만큼, 선거 결과에 관계 없이 여당인 민주당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부산은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좋은 고리가 생긴 것이다.”



△ 부산일보, 4/9, 1면

부산일보의 해당 기사는 <‘신공항’ 거리 두던 이낙연, 투표 다가오자 “적극 해결”>이라는 헤드라인과 통합당 관계자의 비판을 인용해 이낙연 후보의 선심성 공약에 대해 비판하는 뉘앙스를 취했다. 하지만 기사 말미에는 익명의 정치권 관계자 발언 인용을 통해 오히려 이런 선심성 공약에 힘을 실어주는 보도행태를 보였다.

부산상공회의소는 총선 후보들에게 ‘10대 정책’을 제안하고 그 내용을 부산일보와 국제신문에 전면 광고로 게재했다. 부산일보는 <‘신공항’ 다시 꺼낸 與…문 대통령 ‘부산 공약’ 속도낼까>라는 기사를 통해 신공항 건설을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신공항 의제에 대한 찬반 여부와 상관없이 정치권의 총선용 선심성 정책 동조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점점 더 과열되는 거대 양당 중심 보도, 소수 정당 공약은 ‘튀는’ 공약이라고?

소수 정당 소외 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비판한 바 있다. 특히 정책과 관련된 공약 검증에서조차도 소수 정당을 제외한 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국제신문은 10일 두 면에 걸쳐 공약검증 기사를 보도했다. 하지만 검증 대상을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으로 한정된 한계를 보였다. “국제신문은 4·15총선 공약평가단은 부산 18개 선거구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36명 후보에게 받은 대표 공약을 평가했다”라고 밝혀 소수 정당 후보들은 아예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부산시민연대가 지역 현안과 관련한 10대 의제를 제안한 결과, 통합당은 단 두 명만 응답한 반면 오히려 정의당과 민중당은 성실한 답변으로 응답했다.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지역신문이 거대 양당만 취재 대상으로 삼는 것은 문제이다.



△ 국제신문, 4/10, 4-5면

군소정당, 무소속 후보의 공약은 지역구와 관계 없이 한 기사에 묶어 언급했다. <교육실비 제로·광안리 시푸드 축제·만 16세 선거권…튀는 공약 많아>(4/10)에서는 정의당, 민생당, 민중당, 무소속 후보들의 공약을 소개했다. 하지만 지면 분량이 너무 적어 공약 분석보다는 공약 나열에 그쳤다. 특히 ‘튀는 공약 많아’라는 헤드라인에서 ‘튀는’이라는 수식어는 소수 정당에 대한 불필요한 선입견을 강화시킨다. 이는 소수정당 공약에 대한 신뢰감을 떨어뜨릴 수 있다. 소수정당의 공약도 거대 양당과 마찬가지로 정당의 이념을 충실히 구현한 정책이다. 그리고 설사 주류정당과 차이가 나더라도, 그것은 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치를 구현한 것이다.

구분	국제신문	부산일보	합계
후보자 기본 정보	0	2	2
	0.0%	2.3%	1.0%
정책 공약	33	30	63
	30.2%	35.7%	32.6%
후보자 자질	22	13	35
	20.1%	15.4%	18.1%
공천 관련	4	3	7
	3.6%	3.5%	3.6%
선거 전략	21	32	53
	19.2%	38.0%	27.4%
선거 판세 여론조사	21	34	55
	19.2%	40.4%	28.4%
후보 동정	22	21	43
	20.1%	25.0%	22.2%
선거법 관련	11	5	16
	10.0%	5.9%	8.2%
시민 사회 동향	7	1	8
	6.4%	1.1%	4.1%
기타	14	11	25
	12.8%	13.0%	12.9%
합계	155	152	307

△ <표6> 매체별 4·15총선 관련 보도에서 보도 주제(*중복집계)

**기사와 관련 없는 후보 사진 게재하고
후보 광고와 관련 기사 나란히 배치하기도
광고, 사진 배치 신중해야**

광고, 사진과 같은 이미지는 기사문에 비해서는 편향성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한편으론 강력한 시각적 효과로 유권자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사와 관계 없는 사진을 실어 후보자를 지면에 노출시킨 경우도 있었다. 4월 10일자 국제신문 3면 <“지르고 보자”…10년 넘게 ‘해결 못한 약속’ 또 꺼내들어>에는 여야 PK 주요 공약을 설명하면서 금정구에 출마한 박무성, 백종헌 후보 사진을 실었다. 격전지 후보들을 제외하고는 단독 사진이 실리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이 기사는 금정구 후보들의 동정 보도도 아니어서 의아하다. 공공롭게도 해당 사진의 주인공이 국제신문 전 사장 박무성 후보다. 통합당 백종헌 후보의 사진까지 나란히 실긴 했지만 사진 구도에서도 박무성 후보는 승리의 포즈인 만세를 하며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